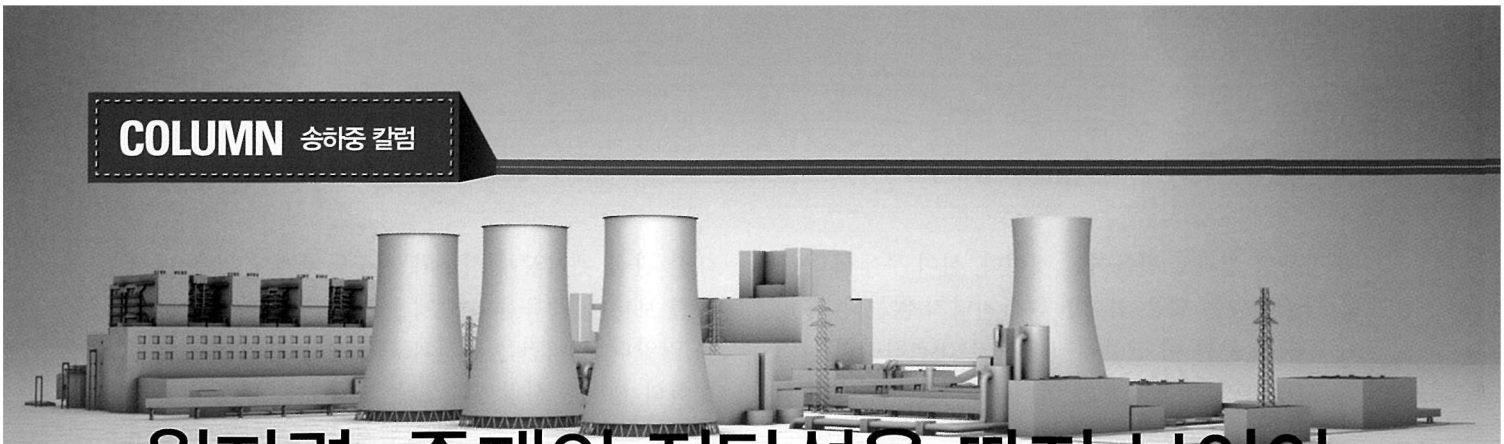

원자력, 존재의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외형이 감지되는 것은 물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무형적인 것도 그 나름대로 어떻게 생겨났고 유지되는지 사연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연유와 바탕을 따져 보지 않고도 잘 살아 왔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확연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정보가 생산 · 활용되면서,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은 물론, 장래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도 정밀한 자료 수집, 분석, 판단이 어렵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간적인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슈에는 다양한 견해 표출과 함께 그 존재 정당성을 판단하는 작업들이 있게 될 것이다.

글_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ahzoong@khu.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NSF 초청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의 정당성

과학기술은 인류 사회 발전을 견인하면서 각 분야별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이 앞으로도 그대로 인정되리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는 과학기술 이슈들에서는 더욱 엄밀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다. 유전공학 분야의 생물, 의학적 진보, 온난화와 환경 문제, 우주개발,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원자력의 정당성 논란

이미 그러한 존재 정당성 논란이 있는 것이 원자력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난 수년간 원자력은 지지, 반대 진영 간의 치열한 논쟁에 휩싸여 들었다. 지지하는 쪽의 논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에너지 소스로서의 경제성과 편리성 등이다. 반면 반대측의 논리는 여러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잠재적 위험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반대 측의 주장에 무게가 크게 실리게 되었다.

원자력 이슈의 복합 · 복잡성은 여러 나라들의 다른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을 포기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새 원전 건설을 허용하면서 원자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상반된 방향설정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원자력 이슈를 다루는 사회적 지혜

원자력은 운영상의 사고 가능성, 특히 사람의 잘못으로 촉발되는 큰 재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할 새 기술 등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원자력 딜레마의 원인이 된 것은 틀림없다. 사실 원자력의 장래가 이렇게 기술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에 달려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선 긴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 원자력 이슈는 에너지 기본 구도 설정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점에서 이 문제는 원자력계만의 고민이 아니다. 관련있는 모든 사람의 진지한 토의와 냉철한 판단으로 사회적 지혜를 작동시켜야 할 사항인 것이다.

원자력 정당성 판단의 기본 요건

여기에서 원자력 이슈를 다루는 논쟁의 장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 요건을 따져 보자. 이는 앞으로 계속 제기될 다른 민감한 이슈들의 존재 정당성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투명성과 적극적 정보 제공이다. 확인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은 물론 불확실한 부분도 그 윤곽을 알 수 있게 가용한 정보는 최대한 제공돼야 한다. 원자력의 잠재적 파괴력으로 인해 특정 기술 및 지식은 국방 · 보안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원자력 종사자들은 관행적으로 내놓기를 꺼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원자력의 수용 · 폐지 여부에 대한 선택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적극적 자세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가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이냐에 상관없이 개방된 시각에서 투명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정보 제공 태도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이나 그룹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원자력의 위험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위해의 형태와 규모, 가능성 등을 그 근거 자료 및 논리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실상을 정확히 알리도록,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원자력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보해야 한다. 각종 언론 매체를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원전 소재 주민, 정부와 공공부문 등 관련 집단 내부 및 상호 간의 의사 소통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입장차가 무엇인지를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시간, 공간 및 기회를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해관계와 관심에 따라 원자력 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고 판단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층위별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최대한의 정보,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고 원자력의 운명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 다른 정보, 해석의 차이 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와 주장이 전개된 후에 이들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것은 정부, 시민 단체, 기업, 언론, 학계 등을 포괄하는 의견 수렴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이를 이끌고 조정할 리더 ·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금도를 지켜야 한다. 우선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는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력한 집행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론 형성 지형 하에서는 정부가 끌고 가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와 인내심이 정부에 필요하다.

원자력을 거부하는 입장에선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대책없이 비토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바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본질이 훼손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들의 중립성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 분석,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본질 문제의 확인을 원하게 되는데, 이때 합리적인 근거 · 예측 등을 과학기술자들이 내놓아야 한다.

원자력과 관련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자칫 기존의 패턴에 매달리거나 고정관념에 묶인 태도를 보이면 그것은 바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진실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에 최종적인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ST